

여야 임시국회 공감...선거 개혁 '화두'

오늘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 후 협상 본격화 야 3당 농성 계속...선거제 협상 재개돼도 험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2월 임시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일찌감치 밝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집 필요성을 11일 공식화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선출되는 만큼 제1야당의 원내지도부가 꾸려지는 대로 12월 국회를 위한 여야 간 협상이 본격에도 오를 전망이다.

12월 국회가 열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이 단연 최대 화두로, 정기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지 못한 여야가 연내 극적으로 합의할지 주목된다.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안이 도출될 때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 농성을 이어가

겠다고 하고 있다. 12월 국회를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 간 대화의 장으로 만들자는 몸부림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한 임시국회 소집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한국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만큼 조속히 당내 논의과정을 거친 후 임시국회를 통해 선거제 개혁을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이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임시국회를 열어서 정치개혁특위를 연장하고 선거제 개혁에 합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거대 양당, 특히 민주당은 각성하고 임시국회에 나서 스스로 약속했

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 개혁에 즉각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20일 원포인트 본회의' 등을 검토해온 민주당도 12월 국회 소집에 긍정적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임시국회를 논의하겠다"며 "유치원 3법을 포함한 민생입법,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등 비상설 특위 연장을 포함한 현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KTX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대법원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야 3당만금 선거제 개혁 논의에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이미 '새해 예산안 처리 이후 선거제 개혁 논의'를 공언한 상태다. 홍 원내대표가 '정개혁위 연장 문제'를 언급한 점도 선거제 개혁 논의 열매에 든 것이다.

한국당은 새 원내대표 선출 후 12월 국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예년처럼 임시국회를 여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상대적으로 완고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을 언급하며 "마지막 속세를 풀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이제 후임 원내지도부가 국민 뜻을 받들어 대표성과 비례성 확대라는 명제 속에서 논의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야 3당 농성의 '출구'가 당장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은 옛새끼 단식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향해 "많은 분이 걱정하는 만큼 단식을 중단해줬으면 한다" (홍영표 원내대표), "다시 한번 충심을 다해 단식을 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김성태 원내대표)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정치 브리핑

"김정은 위원장 꼭 답방하라는 의미"

박지원 의원, 문 대통령 역할론 다시 강조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 답방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동향 등 여러 가지를 볼 때 오래전부터 답방이 어렵다고 봤다"면서도 "그러나 최고 지도자의 신변 안전을 가장 중시하는 북한으로서는 중국을 갈 때도 사전에 발표를 하지 않는 것처럼 답방을 한다고 해도 며칠 전부터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대표는 1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답방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 섞인 분석과 전망을 하는 것은 김 위원장본인과 북한을 위해서라고 꼭 답방을 하라고 촉구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김정은 답방은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비핵화



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처럼, 김정은도 답방해서 한국인과 세계인들에게 비핵화의 지지를 밝히고, 트럼프에게도 나는 약속을 지키고 있으니, 당신도 지켜라,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자고 이야기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렇게 북미가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교착 상태에 빠지는 상황을 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을 잘 설득해 답방하도록 하고, 미국도 극단적으로 가면 안된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오늘 공무원 근로자 처우개선 토론회

최경환 의원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

민주평화당 최경환(광주 북을)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공무원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무직 근로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무기계약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직무내용에 맞게 새롭게 신설하는 직렬이다. 문체부 소속기관 등 공공기관은 그동안 기본적인 임금 및 수당 체계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정홍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근로조건 문제점과 실태'로, 이미숙 공공연대노동조합 사무처장이 '문체부 소속기관 공무원 전환자 임금 및 처우 개선 방안'으로 기초발제를 한다.



토론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담당자들과 공무원 근로자 대표 등이 참여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와 주장을 밝힌다.

최경환 의원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문체부와 소속, 산하기관별로 정규직 전환자들의 임금·수당 체계가 제각각이다"며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취업규칙을 비롯한 인사, 보수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중산천·옥과천 등 위험지구 개선 기대

정인화 의원 특별교부세 31억원 확보

민주평화당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은 11일 광양시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사업 9억원과 구례 중산천 재해 예방사업 7억원, 곡성 옥과천 청단보 설치공사 5억원 등 총 31억원의 광양·곡성·구례 재난안전 및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양지역 노약자 교통사고는 사망사고 4건을 비롯해 모두 163건으로 나타나는 등 교통환경이 열악했다. 특별교부세 9억원이 배정된 이 지역은 보행자 자동인식·음성안내 장치, 고원식 횡단보도, 학교 앞 옐로카펫, 노면표시·속도저감시설 설치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구례 중산천(지방하천)도 집중호우 시 잦은 하천 범람으로 마을진입로 및 주택침수가 자주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통수단면 부족으로 기존 콘크리트보 및 호안정비가 절



실했다. 이곳에도 예산 7억 원이 확보돼 주민피해가 해소될 전망이다.

곡성 옥과천 청단보 설치공사에도 특교 5억 원이 반영됐다. 청단보는 이 지역 농경지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해 왔으나 태풍과 폭우로 일부 유실돼 보 기능이 상실됐지만 이번에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원활한 용수공급과 재해예방을 위한 보강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정인화 의원은 "열악한 재정 때문에 제대로 엄두도 못냈던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들을 특별교부세 확보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광양·곡성·구례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삶을 위해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릴레이 단식농성하는 장병완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기독교 양당 아합규탄 24시간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18 한국관광의 별 광주·전남 4곳 선정

광주대인시장·여수시·보성 제암산·진도 토요일속여행

광주 대인예술시장 등 광주·전남 4곳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18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됐다.

'한국관광의 별'은 관광발전에 기여한 지역의 우수한 콘텐츠를 소개하고,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 관광전문가 평

가단 서면심사·현장평가 등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관광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손꼽힌다.

대인예술시장은 관광연계시설 시장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관광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손꼽힌다.

대인예술시장은 2008년 광주비엔날레 북극방 프로젝트를 계기로 비어 있

는 시장공간에 예술가들이 들어오면서 상인과 젊은 예술인들의 화합 속에 시작됐다. 매주 토요일 야시장에서는 예술작품 판매, 거리공연, 시민 셀러들의 난장이 펼쳐지고 유별난 예술극장에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은 1996년 개장해 쉽고 건강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삼림욕의 최적 장소로 평가받았다. 장애인·노인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5.8km에 달하는 데크 로드를 조성해 안전하게 산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진도 토요일속여행은 1997년부터 22년 동안 매주 토요일 진도 향토문화회관에서 전통민요·무형문화재·창작 공연을 선보이는 공연 프로그램이다.

보는 공연에서 벗어나 '진도아리랑 따라 부르기', '강강술래 함께하기' 등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다.

여수시는 3년 연속 관광객 1,300만 명 이상이 찾는 곳으로 지역관광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근산·황애란 기자

민주당 '막말 도의원' 당원 정지 2개월

윤리규범 등 위반...도의회도 징계수위 논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11일 여성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전남도의회 김홍호(강진2)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무안군 삼향읍 도당 당사 회의실에서 제9차 윤

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피해 당사자인 이혜자 도의원으로 부터 피해 사실에 대한 소명을 들은 뒤 당 윤리규범 5조(품위유지), 당규 7호 14조(징계사유 및 시효) 등을 김 의원이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의결

했다.

민주당 윤리규범(5조)은 "당원은 경위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혐오감 및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규 7호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치는 경우에도 징계 사유다.

김 의원은 지난달 8일 열린 전남도 행정사무 감사 도중 질의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상

임위 여성 위원장인 이 의원에게 폭언을 하고 명패를 던져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민주당은 징계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불복이 있는 경우 본인이 징계 의결서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중앙당에 제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전남도의회에도 김 의원에 대한 별도 징계요구서가 제출돼 도의회 자체적으로도 징계 수위를 검토 중이다.

/정근산 기자

시,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앱 '여기로' 운영

내년부터 대형폐기물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이불,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을 스마트폰 앱으로 배출할 수 있는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스마트폰 앱 '여기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여기로' 앱은 시민들이 대형폐기물 배출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개선하

기 위해 도입, 12월1일부터 연말까지 시범운영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간편 배출 앱을 홍보하기 위해 시청과 서구, 남구, 광산구 등 구청 민원실에서 가입행사를 열고, 앞으로도 각 지구에서 홍보물 배포와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